

교육감의 교육정책 진단과 평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신창기

<본 발제문의 구성>

1. 서론
2.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3. 각 시·도별 재정규모 TOP 10 교육정책
4. 교육정책 TOP3
5. 종합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1년 전인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교육감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대 보수 9:8로 볼 수 있다.¹⁾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보다 당선이 더 많이 되었음에도 진보의 패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양희준, 김용(2022)²⁾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 판단 근거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진보 성향의 교육감 수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보수 성향 후보가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상징인 경기도에서의 진보 성향 후보의 패배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보수 대 진보의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졌으며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하였다.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의 약세 혹은 철회로 볼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 각 시·도는 어떠한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시·도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발제는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평가결과 보고서³⁾와 관련 뉴스 및 각 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문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발제 순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알아보고, 각 지역별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되는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각 시·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약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후 많은 시·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 TOP3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종합 결론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시기에 울산 교육감의 공식으로 울산의 교육정책은 분석 내용에서 빠져 있어 본 발제에서도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1) 광주 교육감을 진보로 분류함. 일부 언론은 광주 교육감을 중도로 분류하기도 함.
2) 양희준, 김용(2022). 2022년 교육감 선거의 특징과 의미. **교육정치학연구**, 29(3), 139-159.
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3).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2. **평가 결과** 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갓춤성, 민주성, 투명성 종합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의 총 6개 지역이다. 교육감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감 임기 내인 2026년까지 99.42%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은 자체예산 88.58%, 국비 9.27%, 시군구비 1.74%, 민간 등 기타 0.41%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	90점 이상 교육청
SA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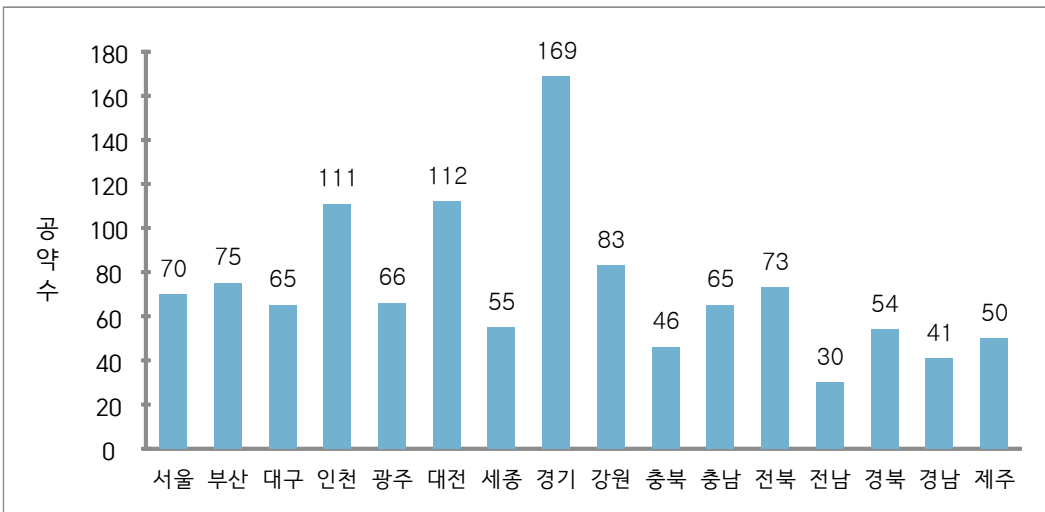
총공약수	완료시기 구분		신규여부			예산여부		국책사업수
	임기내	임기후	지속	신규	지속신규	예산	비예산	
1,165	1,152	13	591	539	35	1,093	72	14

단위: 백만원

총계	임기내	임기후
41,340,556	41,099,158	241,398
100%	99.42%	0.58%

구분	민선 8기	민선 7기	민선 6기
교육감 공약이행 재정	41,340,556백만원	33,447,104백만원	29,868,366백만원

공약이 제일 많은 3개 지역은 경기(169개), 대전(112개), 인천(111개)이며, 제일 적은 3개 지역은 전남(30개), 경남(41개), 충북(46개)이다. 신규공약이 제일 많은 3개 지역은 경기(90개), 인천(60개), 강원(59개)이며, 제일 적은 지역은 광주(6개), 전남(10개), 대구와 제주(19개)이다.



3. TOP 10 교육정책

지역별로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순위에 ✓ 표시는 다른 시·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책을 별도로 표시해둔 것이다. 지역별 특징적인 정책은 별도로 기술하였다. 서울의 경우 교육공무원 운영 방법 개선,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정책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교육공무원 운영 방법 개선	2,579,212
2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2,011,700
3	배움과 쉼, 놀이가 있는 학교공간 혁신	544,014
4	질 높은 돌봄 시행	466,978
5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314,412
6 ✓	식재료 품질관리 및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208,279
7 ✓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200,695
8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질적 도약	179,329
9	깨끗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지원	170,460
10	학교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지원	167,740

그러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학교 노후 시설 개·보수의 재정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학교 노후 시설 개·보수 적극 추진	2,108,354
2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및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126,809
3 ✓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및 학업성취도 평가	94,372
4 ✓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92,660
5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확대	83,351
6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70,095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7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50,983
8	기초과학기술교육 강화	45,996
9 ✓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인건비 예산 안정적 확보	40,510
1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확대	39,739

대구의 경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정책의 재정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대구광역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221,310
2	미래 교육 공간 리노베이션	122,867
3	행복한 또래활동 다양화	86,056
4 ✓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점진적 확대	57,939
5 ✓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및 표준레시피 개발	57,490
6	중대 재해 Zero를 위한 안전·보건 환경 개선	48,716
7 ✓	아이중심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45,080
8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30,448
9	미래형 열린 학교 도서관 구축	21,100
10	탐구중심 학생주도수업 실천 역량 강화	18,920

인천의 경우 미래학교 공간 조성,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학생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공간 조성	468,863
2	지역맞춤형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	405,424
3 ✓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247,914
4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동아시아국제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특수학교 설립	171,001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5	교육청 청사 증개축,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강화기숙사 이전 추진	133,560
6 ✓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 등(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12,560
7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추진	86,340
8	교육주체 참여 예산 매년 200억	80,000
9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제2 유아교육진흥원, 인천교육박물관 설립	79,929
10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65,363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생 교육비 ‘꿈드림’ 지급, 교육용 태블릿 PC 등 무상 보급, 우수식재료비 지원 확대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134,982
2	학생 교육비 ‘꿈드림’ 지급	123,653
3 ✓	교육용 태블릿 PC 등 무상 보급	118,972
4 ✓	우수식재료비 지원 확대	107,183
5	유해물질 ZERO,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확대	78,912
6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설립(이설) 추진 등 과밀학급 해소	46,068
7	특수학교 현대화 추진	40,060
8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환경 교육 실시	39,246
9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유지	35,776
10	광주시교육원 설립	34,236

광주에서 특징적인 정책은 학생 교육비 ‘꿈드림’ 지급이다. 꿈드림은 기존에 지원되던 입학준비지원금,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19시까지 운영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초등돌봄교실 19시까지 운영(최종 모든 초등학교)	140,263
2 ✓	스마트단말기 보급	65,179
3	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설립	37,729
4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34,535
5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31,500
6	스마트칠판 보급	27,197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최종 중위소득 80%이하 초등학생 21년대비 12만원 인상)	26,048
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최종 170교)	25,517
9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23,800
10	가칭)대전복용초 설립	21,809

계획과 달리 2023년 현재 실제 20개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 경우 체육중·고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직속기관 설립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체육중·고 설립	140,270
2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직속기관 설립	130,600
3	미래형 학교모델 구현	77,370
4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45,050
5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3,391
6	학령기 특수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	27,179
7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24,440
8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교원 수급	21,904
9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21,341
10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16,817

경기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방안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경기도교육청)

재정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과밀학급 해소방안 (신설, 증축 등)	4,543,153
2 ✓	스마트기기 보급	966,430
3	정책 실현체제 구축 및 관리	615,120
4	정책 제안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	416,100
5	특수학교 설립 지원체제 구축	389,089
6	교원연구비 인상 지급	375,134
7	통합교육지원청분리	324,149
8	학교복합타운 건설	300,000
9	학교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	246,633
10	방과후 과정 확대	215,692

경기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살펴보면 2022년 28명 수준의 1학년 학급 당 학생 수를 2026년 26명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하며 경기 지역 과밀학급의 비율이 45%인 현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의 경우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강원도교육청)

재정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980,930
2	통학로, 음용수, 공기질, 시설안전 지원	161,305
3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	120,200
4 ✓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제공	86,000
5	교육공무직 및 학교 비정규직 강사 처우 개선	83,905
6 ✓	학생 교육지원금 지급	78,441
7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63,000
8	미래형 수업 환경 구축	59,133
9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교실 무상 운영	56,910
10 ✓	유아교육비 공정지원 및 학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52,983

강원의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를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단위학교에서 재정 운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 1회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그린스마트스쿨)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431,484
2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62,231
3 ✓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	118,010
4	특수교육 지원 확대	93,287
5	AI 영재학교 설립	78,000
6	지자체와 연계한 소규모학교 지원 활성화	69,913
7	고교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50,097
8	지역기반 활용 과학·수학 인재 육성	40,043
9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39,238
10	전인적 인성교육 운영	38,886

충남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충청남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1,298,125
2 ✓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1,165,100
3	기존 건물 석면 2026년까지 100% 제거	99,352
4	교육 시설 내진 보강	98,037
5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직원 주거시설 확충	89,221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6 ✓	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와 14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지원단 확대	74,014
7	순차적 방과후 직영 운영과 방과후 강사 처우 개선	73,982
8	15개 시군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72,760
9	미래형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	49,400
10 ✓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42,501

충남 역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2026년 학급당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에듀페이 지원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전라북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전북에듀페이 지원	187,062
2	학교 안전관리 체제 구축	110,924
3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82,143
4	학교 신설 이전 추진	80,761
5	특수학교·학급 신설 및 증설	66,292
6	식생활관 환경 개선	64,000
7 ✓	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63,172
8	창의예술 미래공간 조성	57,250
9	(가칭)미래교육 캠퍼스 설립 추진	49,082
10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혁신	38,142

전북에듀페이는 신입생 입학준비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전남 학생 교육수당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전라남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전남 학생 교육수당	207,384
2	AI튜터와 함께하는 맞춤형 책임교육 실현	91,434
3	지역업체 제품 구매 활성화	88,598
4	교직원 역량강화와 연수 활성화	70,778
5 ✓	무상 교복·체육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64,844
6	대규모 개발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44,017
7	특수학교(급) 진로교육 지원 강화	35,036
8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강)사 지원	26,315
9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11,733
10	ESG 전남교육지원센터 운영	9,379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목적에서도 나와있듯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고자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경상북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1,242,400
2	학교시설 내진보강 조기 완료	152,257
3	석면제거 조기 완료	149,137
4	교직원 연립 관사 확충	87,259
5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확대	75,225
6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74,376
7	천년의 지혜 인문학 도서관 설립	63,999
8 ✓	공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62,077
9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47,322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0 ✓	3無(방사능, 잔류농약, 유전자변형) 친환경급식 실현	38,494

경남의 경우 학교 노후시설 개선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경상남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학교 노후시설 개선	826,181
2 ✓	공사립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115,544
3	교직원 복지포인트 인상	96,482
4	(서부해안권) 통학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1,573
5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63,762
6 ✓	(창원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43,600
7	(창원권) 교육단지내 생태숲 조성	10,170
8	(서부해안권)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10,066
9	(서부해안권) 해양안전체험관 설립(거제)	9,196
10	(서부내륙권) 방과후학교 내실화(캠퍼스형, 방과후순회강사제)	9,195

제주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오등동 내 초등학교 신설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규모가 큰 10개 공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1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오등동 내 초등학교 신설	88,610
2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전)	78,634
3	학교체육 활성화	51,080
4 ✓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50,389
5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제 구축·운영	47,191
6	읍면지역학교·학생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33,382
7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 강화	31,290

재정 순위	공약내용	재정규모(백만원)
8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보	29,339
9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25,151
10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	13,922

4. 교육정책 TOP3 각 시·도별 재정규모가 큰 10개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TOP3 정책은 다음과 같다. TOP1은 현금성 지원(교육수당, 수학여행비 지원, 입학 축하금 등) 정책이다. 인천, 대구, 강원, 부산, 충남, 광주, 전북, 전남의 8개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TOP2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밀학급 해소 등) 정책이다. 경기, 인천, 충남, 광주, 경북, 경남, 부산의 7개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TOP3은 급식 지원(친환경 급식 및 식자재 지원) 정책이다. 서울, 강원, 충북, 대구, 광주, 경북의 6개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5개 지역), 유치원 지원(무상교육 포함, 5개 지역), 스마트기기 보급(4개 지역), 기초학력(4개 지역) 정책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임기 내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감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임을 고려했을 때 부득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평가는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약 집행률, 예산 사용률과 같은 정량적 수치로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면담과 같은 정성적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정량과 정성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실현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의 그린스마트 학교 정책이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정책이 철회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책을 집행하기 전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교육 주체들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도의 경우 교육감과 시·도지사 혹은 시·도의회와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존재하여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단위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많은 시도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복지정책은 정치적 이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는 지방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청이 넘쳐나는 여윌돈을 주체하지 못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

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온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교육지원금, 입학축하금 등을 교육지책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같은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책구분이 어렵다. 언론에서 분류하는 보수와 진보 교육감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각 시·도에서 집중하는 정책만을 살펴보면 누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섯째, 더 이상 '혁신'의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도 교육청의 슬로건에 '혁신' 단어가 들어간 지역은 서울, 광주 2개 지역에 그친다. 보수 교육감 지역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조차 혁신이라는 단어는 발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교육감을 중도로 분류하는 언론도 있음을 고려할 때, 진보 교육감 중 혁신의 단어를 슬로건으로 내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서울을 제외하고 충북, 전북의 2개 지역에서만 혁신 단어가 포함된 정책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또한 공간 혁신에 그치고 있다. 즉, 이제 진보 교육감들조차 혁신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제를 준비하며 생긴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B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육계에서 최근 관심이 뜨거운 정책 중 하나인 IB의 경우 대표적인 지역으로 불리는 대구, 제주의 IB 교육을 살펴보면 들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제주의 경우, 언론에 따르면 현 제주도 교육감 취임 이후 확대보다는 현행 유지기조를 띠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IB 인증학교 3곳, IB 후보학교 5곳, IB 관심학교 4곳의 총 12개교에서 단계별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초등학교가 9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전체 초등학교는 114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30교임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 초중고의 6.3%인 12개교에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구의 경우, 현재 IB 월드스쿨 14교, 후보학교 13교, 관심학교 5교로 총 32개교에서 단계별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초등학교가 12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6교이다. 대구 전체 초등학교는 233교, 중학교는 125교, 고등학교는 94교임을 고려했을 때 대구 초중고에서 약 7%만이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역시 IB교육은 좋은 대안이며 확산 들면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최근 경기도, 전북,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IB교육에 대한 찬반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IB 후보학교 등록을 위해 약 600만원, 인증학교의 연회비는 약 1,300만원(고등학교 기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귀족교육이라는 입장이며 찬성 측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은 IB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며 IB에 지불하는 돈은 IB 운영학교에 재투자 되기에 세금의 국외 유출 및 낭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IB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IB가 아니더라도 토론식 수업, 협력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1일, 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첫 수업에 들어가며 시작된 IB는 이제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IB에 대해 교육과정인지, 프로그램인지, 철학인지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 각 지역에서 IB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기기 보급의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학교 현장에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며, 학생 1인 1스마트기기의 환경이 조성되면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 등 기기보급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있다. 각 지역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다문화 밀집학교, 소규모 학교, 교육균형 발전대상교를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하여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경북 역시 초등학교 1학년과 다른 학년을 구분하여 학생 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즉, 이상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특히 1학년)에 집중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우선시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달단계 특성상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한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원 증원 없는 이러한 정책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의 정책일 수 있다. 저학년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결국 다른 학년의 학급 당 학생 수를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정책은 시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